



세월호 인양 이후

의혹 없는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미수습자 전원 수습



단국대홍익문화재단 제공

세월호 인양 후
문제들

2~3면

박근혜와
모든 공범들을
구속하라

8면

프랑스 대선
국민전선의
위협과 파시즘

4~5면

문재인 후보
알량한 공약으로부터도
뒷걸음질

6면

심상정 후보
투표일에
차선책이 될까?

7면

기아차
불법파견과
현장 통제 강화

5면

광고
분노의 촛불 세대를 위한
토론 광장 4월 29일~30일

4면

세월호 인양 후 미수습자도, 참사의 진실도 유실돼서는 안 된다

김승주

1월 7일 세월호 참사 1천 일 집회의 제목은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였다. 이제 그 말이 현실이 됐다. 결국 녹슬고 찢기고 구멍 뚫린 채 올라온 세월호는 검찰이 박근혜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데 강력한 압박 요인이 됐다. 그러나 배를 육상에 무사히 거처하고 미수습자를 가족 품에 돌려 주기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인양 결정을 발표한 2015년 4월 이후 꼬박 2년 동안 인양을 미뤘다. 매년 어처구니없는 실수와 준비 부족이 그 이유였다. 중간에 인양 방식도 두 번이나 변경됐다. 그러는 동안 자식의 뺨조각이라도 찾고 싶다는 일념으로 진도 앞바다를 지킨 미수습자가 족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 갔다.

그러나 박근혜 파면 결정이 가까워

지자 해수부는 갑자기 인양 계획을 통보했다. 박근혜가 파면되자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신속성을 발휘해, 본격 작업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인양을 끝내 버렸다. 그 과정에서 부주의하게도 선체 조사의 중요한 증거물인 좌현 램프(배 안팎으로 화물이 드나드는 다리)를 뜯어 내어 화물이 일부 쏟아져 나오는 일까지 발생했다.

정권의 수장이었던 박근혜가 대다수 국민들로부터는 물론 보수적인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버려지자, 해수부 관료들은 이제 그에게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을 미루고 새 정권 하에서 살 길을 찾아 나서려는 듯하다.

뒤집어 보면 박근혜가 여태껏 인양을 끈질기게 가로막아 온 것은 세월호가 인양되고 조사돼서 세월호 참사가 다시금 주목받고 정부의 책임이 또다시 조명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왔다 구조 방기, 진실 은폐, 인양 연기. 이 모든 책임에 박근혜 정권이 있다. 행진하는 유가족들

선체 조사로 무엇을 밝혀야 하는가

인양된 세월호가 말해 줄 진실은 근본적으로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해서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체제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는 말에 구체적 힘을 부여하는 과정”(416가족협의회)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투쟁이 그 첫걸음이다.

세월호 특조위가 수행한 시물레이션과 조사에 따르면, 사고 지점 전까지 5도 내외로 방향을 조절하면서 “극히 정상적으로 운항”하던 세월호는 갑자기 오른쪽으로 회전했다.

세월호 선원들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러한 급선회의 원인으로 조타수의 실수를 지목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조타기 고장, 엔진 고장 등 “기기 결함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체를 인양한 뒤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직접적 침몰 원인을 규명하려면 인양된 선체에서 해당 부분을 정밀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기기 결함은 노후선인 데다 제대로 수리나 점검이 되지 않은 당시 세월호의 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급선회 직후 세월호는 15~20도 가량 기울 것으로 추정된다. 세월호가 최대로 버틸 수 있는 횡경사각(기울어진 정도)이 20.5도였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후 화물이 쏟아지면서 세월호가 버틸 수 있는 20.5도마저 초과했고, 그다음으로 배가 2차로 30도까지 기울어 견잡을 수 없는 전복이 시작됐다.

따라서 어떤 화물이 어떻게 실리고 고정됐으며 얼마나 움직였는지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화물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화물 조사로 청해진 해운의 과적과 불량한 고박이 침몰에

끼친 영향, 특히 제주 해군기지행 철근이 어떤 구실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 밖에, 배 안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새로운 증거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해수부는 인양한 선체를 절단해 객실부를 떼어 내겠다고 한다.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진상 규명에 필요한 핵심 증거물들이 파손돼도 모라라다. 해수부의 진짜 속내는 인양 후 속작업을 빨리 끝내 버리려는 것 같다.

진실

해수부는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 규명이라는 과제를 은근히 대립시키며 피해자 가족들 사이를 이간질한다. 그러나 참사의 총체적 진실을 구성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안전 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은 미수습자의 조속한 전원 수습과 동시에 진행돼야 할 일이다.

4·16가족협의회는 절단 과정에서 화물이 쏟아지거나 객실이 붕괴할 위험이 커, 빠른 수색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미수습자의 시신이나 유품이 심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말한다(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어디까지 왔나).

무엇보다 참사의 공범인 해수부가 인양을 차일피일 미뤘던 지난 2년 동안, 미수습자 가족들은 “나도 유가족이 되고 싶다”며 울부짖었다. 피해자를 수습하고 나면 바로 그들이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진상 규명 투쟁의 일원이 될 것이다. 이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해수부의 수작은 너무 악랄하다.

해수부는 선체조사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사기구가 선체 조사 방식과 보존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선체를 함부로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해수부가 인양 마무리 작업을 부주의하고 졸속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의 감시가 필요하다.

박근혜, 황교안, 우병우, 김기춘 …

책임자들을 모두 처벌하라

박근혜가 파면된 이후,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가 남기고 떠난 적폐들 중에 청산 대상 1호로 꼽힌다.

우선 인적 적폐들을 청산(책임자 처벌)해야 한다. 당연히 1순위는 박근혜다.

박근혜는 탄핵 판결을 앞두고, 자신이 구조의 ‘골든타임’이 다 지난 후 에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없었고, 따라서 저야 할 책임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라는 거대한 관료적 기구의 폭대기에 앉아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순 없다. 오히려 진실은 규제 완화(안전 점검 서류화 등)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 등 박근혜가 참사 당일 배 주변에 있던 말단 해경들보다 더 큰 권력으로 더 나쁜 짓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질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넣었던 황교안과 우병우,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지시한 김기춘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들을 뒤따라 수갑을 차야 할 해수부, 해경 책임자들도 줄줄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기소조차 안 되거나 ‘깃털’ 징계만 받고 책임을 털어버렸다. (3면 인포그래픽 참고)

인허가나 안전 점검과 관련된 공직자들도 대부분 기소를 피하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참사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형이 가벼워진 경우도 있었다.

청해진해운한테서 뇌물 3천5백만 원과 양주 3병을 받고 세월호 도입을 허가해 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과장 박성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직접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던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이 일제히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반면 항의에 나섰던 유가족은 길을 가로막은 경찰과 싸우다 피를 흘리고 연행되기도 했다. 참사 현장에서 목숨 걸고 피해자 수습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들도 되려 해경에 의해 과실치사 범죄자로 몰렸다. 그 억울함에 김관홍 잠수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싸웠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를 구실 삼은 국가에 의해 구속됐다. 그날 백남기 농민은 정권의 살인 물대포를 맞아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들은 탄압과 모욕에 시달리고, 참사의 주범들은 다리 뻗고 자는 율화통 터지는 3년이었다. 이 시간은 또한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이 국가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하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메르스 참사,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가슴기 살균제 대참사 등 사고가 반복됐다. 죄 없는 생명들이 또 다른 ‘세월호’에 실려 우리 곁을 떠났다.

참사의 책임자들이 더는 요직을 들

면서 평평거리게 뉘워선 안 된다. 책임자 처벌은 정의의 문제이고, 안전 사회 건설의 첫 단계다. 반드시 박근혜와 함께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한편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진짜로’ 달라지려면 참사를 낳은 정부 방침과 정책들도 일소해야 한다.

국가가 기업주들과 부자들한테서 세금을 걷어, 안전 사회를 위한 예산에 투자하게끔 강제해야 한다. 공공 부문에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하고, 철도·의료 민영화 등도 중단시켜야 한다. 또,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노동 환경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은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 특히 노동자 운동의 과제와 떨어질 수 없을 것이다.

4월 15일에는 ‘4월 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전야 문화제가 서울 광화문광장과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4월 16일 안산에서는 기억식이 진행된다.

지난 다섯 달간 감동적인 역사를 써 온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들이 이날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촛불을 들고 다시 모이자.

함께 참가합시다!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전야 기억 문화제
일시 : 4월 15일(토) 오후 6시
장소 : 광화문광장
주최 :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세월호참사 3년 기억식
일시 : 4월 16일(일) 오후 3시
장소 : 안산 합동분향소
주최 :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추천 소책자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김승주 지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펴냄, 72쪽, 3,000원
※ 구입 문의: 010-5443-2395

세월호 투쟁의 교훈과 과제

세월호 참사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
지고 있던 국가에 대한 ‘상식’이 깨졌다. 그
리고 그 자리에 박근혜 정권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가 싹텄다.

차곡차곡 축적된 분노는 항상 운동으로
분출한 것은 아니었지만, 광범한 반박근혜
정서의 핵심 토양이 됐다. 그리고 노동자들
의 저항과 함께 바로 이 토양 위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자라났다.

세월호 소유주 청해진해운은 해수부로부터
2011년 종합우수선사로 선정됐고, 2013년 2월 인천해경·항만청 등의 합동
특별점검에서는 비상훈련 실시 분야에서
‘양호’ 평가를 받았다. 한 해 동안 접대비로는
무려 6천만 원을 쓰면서도 안전 교육에는
겨우 54만 원을 지출한 덕분이었다.

이런 부패의 카르텔은 정부가 선박 안전
점검 업무를 해운사들의 입김이 절대적인
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에 떠넘겼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는 생명보다 이윤
을 우선하는 수많은 정책으로 대형 참사를
사실상 ‘예비’해 왔다. 재난 관리에 대한 재
정 투입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마이너스
4.9퍼센트를 기록했고, 선박 좌초 시 대처
를 담당하던 지방 해양경찰청들의 수색구
조제도 예산 축소로 없어졌다.

무엇보다 세월호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용 철근 수백 톤이 실려 있었다. 화물 과적과
불량한 고박은 배가 돌이킬 수 없이 기울게
된 원인 중 하나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
에게 구조 방기와 규제 완화의 책임만이 아
니라,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참사의 주범답게 참사 이후 책
임을 덮기 위한 악랄한 짓을 계속했다.

침몰하는 배 앞에서 거짓말이나 지어 내던
해수부와 해경의 책임자들은 처벌을 피하고
심지어 승진을 거듭했다. 그 뒤에는 해경 압
수수색을 막고 세월호 수사팀을 해체하려고
외압을 넣었던 당시 법무부 장관 황교안, 당
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우병우, 당시 검찰총장
김진태 등 박근혜 정권의 실세들이 있었다.

국가 고위 공무원들은 나와서 다시는 이
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개
를 숙였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

국가에 맞선 싸움

경제 위기에 얹는 소리를 내며 규제를 더
완화하고 더 많은 알짜배기 공공 사업들을
시장으로 넘기라고 아우성치는 자본가들에
게 박근혜 정부는 안전 조치를 강화하라는
강제력을 행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역겨운 언론 플레이로
대중과 유가족들을 이간질하고 물리력을 이
용해 운동을 탄압하며 진실을 은폐했다.

믿을 수 없는 검찰·경찰에 세월호 참사
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맡길 수 없다
고 생각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
소권이 보장된 독립적 진실 규명 특별법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그러자 7백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 요구를 지지하며 서명
에 동참했다. 유가족들은 국회 앞, 청운동
사무소 앞, 광화문에서 풍찬노숙을 하며 농
성을 이어갔다. 그러자 국회에서도 이 법안
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의 악랄한 방해와 야당의 계
속된 배신으로 유가족이 요구한 특별법안은
암초에 부딪혔다. 운동 내 온건파 리더들이
이에 실용주의적으로 타협했다. 유가족
들은 두 차례 여야 아합을 거부하며 싸웠지
만 여야는 끝내 기소권과 수사권이라는 알
맹이가 다 빠진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류 야당들의 기회주의와 배신은 ‘반쪽짜
리’ 특별법 아합 이후로도 계속됐다. 박근혜가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시행령
을 강행했지만 아무 구실도 하지 못했고, 지난
해 4월 총선에는 여소야대가 되면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 호언장담했지만 정부의 특조위
강제 종료 시도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은 세월호 문제를 여야 간 정
치 협상에서 쓸 카드 한 장쯤으로 여겼고,
새누리당이 특별법 개정안을 농해수위 안
건조정위로 넘겨, 정부의 강제 종료 시한 이
전에 특별법을 개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사
실상 방조했다.

분노한 유가족들이 민주당 당사에서 단
식 농성을 벌이며 싸웠을 때도 민주당은 ‘노
력하겠다’ 둘러대기만 했고, 국민의당도 농
성장을 찾아와서 “사실상 개정은 어렵다”고
변명했다.

이것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 할
지라도 세월호 운동의 요구가 저절로 성취
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준다.

세월호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려면 안전
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하고, 그것은 자
본가들과 국가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가능하
다. 그러나 부르주아 야당인 민주당은 궁극
적으로는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에 의존해 국
가를 운영하고자 한다(때로 포퓰리즘적으로
운동의 압력에 반응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배경인
규제 완화와 민영화에 근본에서 반대하지
않는다. 특히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철
도 민영화, 가스 민영화, 한미FTA, 제주 해
군기지 건설 결정 등에 함께했고, 세월호 참
사 이후로도 ‘민영화 추진법’인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놓고 박근혜를 만나 ‘통 큰’
양보를 약속했다.

참사의 주범인 박근혜가 권력에서 물러
나고 본격적인 선체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 요구
가 나올 수 있다. 기존 검찰의 조사는 정부
의 책임을 꼬리 자르기 하려는 의도가 다분
했기 때문이다.

지난 3년을 돌아봤을 때 이런 요구를 성
취하려면 국가에 맞선 싸움이 계속 돼야 하고,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김승주는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으로,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저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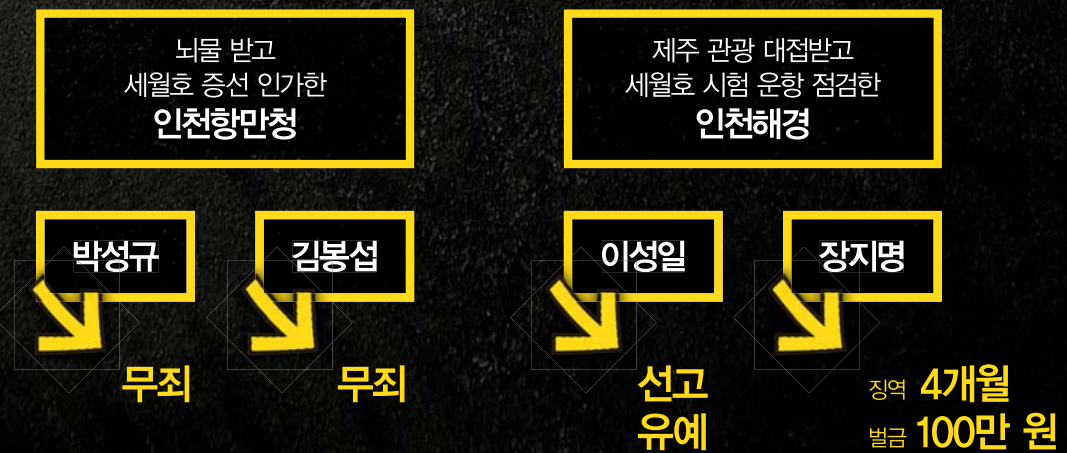


처벌은커녕 승진한 책임자들

구조 지휘부 보고 계통도



세월호 운항을 승인한 사람들



새로 나왔습니다

이론과 실천의 통일

마르크스21

19호 2017년 3~4월 13,000원

구입 문의: 도서출판 책갈피 (02-2265-6354, chaekgalpi.com)

마르크스21 19호 2017년 3~4월

이론과 실천의 통일

마르크스21 19호 2017년 3~4월 13,000원

프랑스 국민전선의 부상

파시즘의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기

김종환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프랑스 대선에서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이 박빙으로 지지율 1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주류 언론은 마린 르펜을 “극단주의”라 부르며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르펜과 국민전선은 극단적이고 경계해야 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장돼야 할 세력이다.

그런데 주류 언론은 르펜이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것을 “극단주의”의 주된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지난해 영국인들의 유럽연합 탈퇴 표결에서 보듯 평범한 노동계급의 다수도 유럽연합에 반대한다. 유럽연합이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를 확산하는 구실을 해 왔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브렉시트는 영국 노동계급과 세계 노동계급의 일보 전진이다’) 주류 언론은 이런 유럽연합을 옹호하려고 “극단주의”를 경계하자고 떠드는 것이다.

또한 르펜은 지독하게 인종차별(특히 무슬림 혐오)을 부추긴다. 주류 언론은 이에 대해서도 극단적이라고 논평하지만 똑같이 인종차별적인 다른 주류 우파 후보들에 대해서는 ‘온건하다고 비판한다.

르펜이 주류 우파 후보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그가 파시즘 운동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사실이다. 파시즘 운동은 영국독립당 같은 우익 포퓰리즘과 달리 의회제 대의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르펜이 본질적으로 파시스트라는 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파시즘이 노동자계급 조직들을 다 분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파시즘은 다른 우익 정권과 어떻게 다른가?

흔히 파시즘을 권위주의 정권 정도로 느슨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파시즘이 권위주의 정권 수립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맞지만 통상적인 권위주의 정권보다 훨씬 반민주주의라는 점을 간과한다는 문제가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 같은 군부 독재도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억압하지만 노동자계급 조직을 몽땅 파괴하는 데서는 파시즘에 미치지 못한다. 박정희-전두환 치하에서도 민주노조들과 이들의 지지를 받은 (김대중의) 민주주의적 야당이 (제약 속에서나마)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파시즘은 이런 단체들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뿐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 정당, 사회단체와 소모임 등이 모두 파괴 대상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파시즘이 대중 운동이고 그 핵심 구성원이 중간계급 소속이기 때문이다. 중간계급은 노동자계급 거주 지역에서 함께 살고 노동자들의 작업장에도 드나드는 등 노동자계급과 밀착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지역과 공장에 앞잡이와 지지자들을 두고서, 가장 사악한 경찰국가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노동자계급 조직들을 공격할 수 있다.

1930년대 히틀러는 유대인 학살로 악명 높지만 독일 자본주의 입장에서 히틀러의 주된 사회적 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막

강했던 독일 노동자계급의 조직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노동자들을 원자화해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었다.

이를 두고 당시 트로츠키는 이렇게 썼다. “파시즘의 역사적 기능은, 자본가들이 민주주의적 기구의 힘을 빌어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노동계급을 분쇄하고 노동계급 조직을 파괴하며 정치적 자유를 말살하는 데 있다.” (이하 모든 인용은 트로츠키)

왜 반파시즘 운동에서 노동자계급이 중요한가

주류 평론가들은 파시스트가 성장하는 데 핵심 요인이 빠어난 웅변술이나 대중 심리 조작인 듯이 말한다.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평범한 대중은 멍청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시즘의 성장 비결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파시즘의 성장은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에서 비롯한다.

예사로운 시기에 중간계급은 자본가 계급에 경제적·정치적으로 종속돼 있고, 그 구성원들은 서로 잘해야 ‘남남’이고 많은 경우에는 경쟁자다. 그래서 객관적 처지를 볼 때 노동자계급과 달리 정치적으로 단결할 동력이 없어 원자화돼 있다. 그래서 중간계급은 독자적 정치 세력을 이루기 어렵다.

그러나 극심한 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틀로는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는 한편, 노동자계급도 혁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얘기가 크게 달라진다.



마린 르펜은 '정장 입은' 나치다

“사회적 위기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첨예한 상태에 도달하면, 프티부르주아지[중간계급]를 분노하도록 선동하고 그들의 증오와 절망을 프롤레타리아[노동자계급]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을 직접적 목표로 하는 특별한 정당이 전면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1930년대 초 독일이 바로 그랬다. 제1차세계대전 전쟁 보상금 지급으로 경제가 파탄 난 데다 거기에 1929년 경제대공황까지 닥쳤다.

바로 이런 조건에서 히틀러는 노동자계급과 대자본을 모두 비난하며, “프티부르주아지 자신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는 지도자”가 되고 “인간 먼지들로 전투 본진대를 조직”할 수 있었다.

히틀러의 깡패 조직인 돌격대(Sturmtruppe)는 거리를 휩쓸며 노동조합과 유대인 상점 등을 물리적으로 공격했다. “말만 하는 노동계급 정당들과는 달리 무력을 사용해 더 많은 ‘정의’를 확립할 것”이라며 신선한 대

안임을 자처했다. 또한 계급 갈등이 사라지고 국민적 단결이 이뤄지는 이상향을 건설하겠다고 주장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간계급 다수가 파시즘으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편에서 자본가 계급에 맞서는 투쟁을 지원하거나 적어도 중립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려면 “프롤레타리아가 명확한 행동강령이 있어야 하고,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권력 장악을 위한 투쟁에 나설 태세가 돼 있어야 한다.”

1930년대 독일에서는 노동자계급이 분열해 궤멸적 패배를 당했다. 사회민주당은 당원이 1백만 명이나 되고 정당방위를 위한 자체 무장 조직도 있었지만 ‘헌법 존중’에 집착해 그 힘을 사용하길 한사코 삼갔고, 공산당은 사회민주당을 파시즘의 일종으로 보는 초좌파적 종파주의 노선을 취하는 바람에 반나치 단결의 기회를 놓쳤다.

▶ 5면으로 이어짐

분노의
촛불 세대를 위한도로론
광장

4월 29일(토) -

4월 30일(일) 장소: 서울 (추후 공지)

주최 노동자연대 workersolidarity.org

참가 신청 : workersolidarity.org/forum2017

이호중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유가족 추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조직노동자운동팀장최영준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박병우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민주노총 대협실장이유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전 하나 줄이기》 저자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현주
《노동자 연대》 여성 문제 담당 기자

김문성 <노동자 연대> 박근혜 퇴진 운동 특별취재팀장

김인식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김영익 <노동자 연대> 동아사이 담당 기자

장호중 <노동자 연대> 기자

... 등

시간표

4월 29일(토)

10:00~11:30 세월호 참사, 거짓말과 진실 _ 이호중

박근혜 퇴진 운동의 교훈 _ 박병우, 권영국, 최영준

11:50~13:20 (선택 강연) 트럼프, 아베, 시진핑, 푸틴 - 열강들의 각축장이 돼 가는 한반도 _ 김영익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 자본주의와 여성 차별 _ 이현주

14:40~16:10 (선택 강연) 왜 이토록 불평등한가? - 마르크스주의와 계급 _ 김하영

16:30~18:00 2017년 대선 이후의 전망과 촛불 세대의 과제 _ 최일봉 등

4월 30일(일)

10:00~11:30 국정 역사교과서 비판 - 바로 보는 한국 현대사 _ 섭외 중

세월호 참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11:50~13:20 (선택 강연) 국가는 무엇인가? _ 김문성

왜 핵발전은 나쁜 에너지인가? _ 이유진, 장호중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 우리가 모르는 민주주의 _ 김인식

14:40~16:10 (선택 강연) 비정규직의 어려운 현실과 저항 _ 섭외 중

16:30~18:00 마르크스가 촛불 세대에게 말을 건다 - 마르크스주의의 현재적 의미 _ 최일봉

※ 웹사이트(workersolidarity.org/forum2017)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참가비 이틀 30,000원 하루 17,000원

대학생·청년실업자 할인가 이틀 20,000원 하루 12,000원

청소년·이주노동자·장기투쟁 작업장 노동자 할인가 이틀 10,000원 하루 6,000원

참가신청 및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il@workersolidarity.org

참가비 납부 계좌 국민은행 017001-04-089255 / 농협 100037-56-119794 (예금주 백은진)

화성 사내하청분회 투쟁을 지지하며

불법파견, 신규채용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김우용 기아차지부 조합원, 금속노조 대의원

기아차 화성 사내하청분회가 3월 31일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4시간 조퇴 파업을 하고 금속노조와 함께 서울 상경 투쟁을 한다. 분회 집행부는 조합원 간담회, 대의원 현장순회, 중식 홍보전 등 조직에 한창이다.

그동안 화성분회는 사측과 기아차지부 집행부, 소하리·광주 사내하청분회 집행부가 지난해 10월 합의한 신규채용에 반대해 투쟁해 왔다. 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자동차 제조업에서 파견은 명백히 불법이므로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신규채용은 사내하청 노동자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그것도 그동안의 근속·체불임금·공정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다. 정몽구에게는 불법파견의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들은 적은 신규채용 자리를 두고 서로 경쟁하고 반목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화성분회가 굳건하게 신규채용 합의에 반대하며 투쟁하고 있는 것

은 완전히 정당하다. ‘몇 해 전에 이미 현대차에서 신규채용이 관찰됐으므로 기아차도 어쩔 수 없다’는 논리도 있지만, 기아차는 사내하청 노동자 3천여 명이 조합원으로 조직돼 있고, 정규직까지 합치면 그 힘이 막강하다. 현대차의 잘못된 전철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다.

반갑게도, 지난 2월 10일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기아차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화성분회가 올바르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온 덕분이다. 최근에는 ‘2심 판결과 상관 없이 추가 협상은 절대 없다’던 사측이 신규채용 후속 협의라는 명분으로 특별 교섭을 재개했다. 이는 화성분회의 투쟁 성과이자,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속에서 정몽구의 뇌물 제공, 불법파견 등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덕분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화성분회 집행부가 3월 31일 검찰청 앞으로 가 정몽구의 불법을 단죄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투쟁이 좀 더 전진하려면 이날 4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생산 현장에서 직접 결판을 봐야 한다. 기층의 분



정규직 집행부는 사내하청분회와 함께 정규직화 투쟁에 나서야 한다. 사내하청분회의 현장 순회 모습

회 조합원들을 더 자주 집회와 파업으로 결집시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비조합원 조직화에 힘써 힘을 키우고, 정규직 활동가·조합원들의 연대를 끌어내 함께 사측에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

강제 공정 재배치

최근 재개된 교섭에서 노조 측 교섭대표인 부지부장은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와 ‘신규채용 확대’를 주장하며 모순된 두 가지 요구를 내놨다. 지부 집행부는 그동안 신규채용 합의를 대단한 성과인 양 치장을 하다가, 법원 판결로 자신의 배신적 합의가 공색해지자 은근슬쩍 정규직 전환 요구를 끼워 넣은 것이다.

그러나 만약 김성락 집행부가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고자 한다면, 신규채용 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분회와 함께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제 공정 재배치를 위한 실사부터 중단해야 한다.

강제적 공정 재배치는 일부 노동자들을 신규채용 하는 데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거나, 사측은 작업 지시·관리 체계상 신규채용자들을 특정 작업공정으로 모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분회 조합원의 상당수가 신규채용 응시와 상관없이 여기저기로 공정을 옮겨야 한다.

이는 “전환배치 시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분회의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지부·화성지회 집행부는 신규채용 합의를 지키려고 공정 재배치 추진을 밀어붙여 원성이 자자하다.

지회 집행부가 김성락 집행부를 핑계 삼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 당장 공정 재

배치 시도를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 투쟁에 함께 나서야 한다.

기아차의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법원 판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 투쟁을 건설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고서는 정몽구의 양보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분회의 투쟁을 지지·엄호하면서 기층에서 단결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 집행부가 분회의 투쟁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화성공장의 활동가들은 원하청 공동 투쟁의 전통이 있다. 자랑스런 전통을 되살려 정규직 전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자.

사측의 현장 통제 시도에 맞서 저항이 시작되다

이명환 기아차지부 화성공장 대의원

1천 7백만 명이 참가한 대중 운동이 마침내 박근혜를 파면시켰다. 3월 27일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통쾌한 일이다.

그러나 박근혜 파면은 결코 투쟁의 끝이 아니다. 지금도 노동 현장 곳곳에서 박근혜 표 노동개악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막아 내고 노동개악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것이 우리가 외친 ‘적폐 청산’의 길일 것이다.

기아차 사측도 호시탐탐 우리의 임

금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연초에 사측은 일반직 관리자들의 임금을 동결한 데 이어, ‘신임금체계’라는 이름으로 임금체계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유사한 협상이 진행 중인 현대차에서는 사측이 상여금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사측이 최근 현장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도 바로 이런 공격을 앞두고 사전에 예봉을 꺾으려는 시도다. 사측은 3월 17일 소하리 공장을 시작으로, 화성·광주 공장의 부서장들을 통해

지각을 많이 한 노동자들(상위 0.1퍼센트), 조퇴를 많이 한 노동자들(상위 1.3퍼센트)에게 경고성 통지문을 발송하고 개별 면담을 실시하라고 현장 관리자들에게 지시했다.

이는 근태(출근과 결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현장 노동자들을 옥죄려는 시도다. 기아차 단체협약에도 조퇴 사용 등은 자율적으로 노동자들이 알아서 하면 될 문제로 규정돼 있다.

더구나 근태 관리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점수를 매기게 되면, 하위 점수를 받은 이들을 ‘저성과자’로 낙인 찍기가 쉬워진다. 조퇴·지각 단속이 임금체계 개악이나 성과퇴출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안 그래도 사측은 몇 년 전부터 우리에게 임금체계 개악을 압박했고, 현대·기아차 판매 노동자들에게는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시

도해 왔다.

사측의 도발에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노동조합도 조퇴·지각 단속을 명백한 ‘단체협약 무력화 행위’로 규정하고 본관 항의 집회와 타격 투쟁 방침을 정했다. 또 대의원들에게 사측이 발송한 통지문을 수거하고 개별 면담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앞서 소하리 공장에서도 일부 사업부 대의원들이 사측에 강력히 항의한 데 이어, 화성공장에서도 통지문이 발송되자마자 조립 1부와 도장 3부에서 대의원들이 부서장실 타격 투쟁을 했다. 조립 3부는 신차 양산협의를 거부하며 항의했다. 곳곳에서 즉각적인 항의가 이어지자, 화성지회 집행부는 다음 날 오전에 바로 전체 대의원들을 모아 본관 항의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측은 현장 통제와 단체협

약 위반에 대해 사과는 고사하고, 항의방문을 이유로 조립 1부 대의원 간사인 나와 대의원 총괄간사, 도장부 공투위 의장(대의원대표 격)을 고소·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쉽사리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사측의 답변인 셈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를 걱정하는 사측은 올해 만만찮은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이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해 현장 통제 강화에 나선 만큼, 우리 측도 이 투쟁에서 쉽게 위축되거나 물러서선 안 된다.

지부·지회 집행부는 물론 현장의 대의원·활동가들은 기층에서 조합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며 투쟁을 대중적으로 조직해 나가야 한다. 이번 투쟁이 승리하는 것은 고소·고발 등 탄압을 물리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 4면에서 이어짐

혁명가들의 과제

오늘날 프랑스는 파시스트 돌격대의 규모가 히틀러 때보다 비할 데 없이 작다. 의회 등 제도권 진출을 위해 폭력을 지지하지 않는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는 제약 때문이다. 그러나 르펜이 당선하고 때가 도래하면 유럽 각지에서 파시스트 세력이 급부상하도록 부추길 것이다. 이는 다시 르펜의 기를 북돋아 주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파시스트 돌격대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당장 파시스트 후보의 당선을 막더라도 앞서 말한 파시즘 성장의 동력(특히 노동자계급의 무기력과 분열)을 없애지 못한다면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이 사회를 바꿀 진정한 대안이 누구에게 있는지 중간계급에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당장 유럽연합 문제를 포함한 지배자들의 긴축에 실질적으로 맞서는 것이 파시스트를 막는 데 중요하다.

또한 파시스트는 차별과 전대를 받는 사회집단들(히틀러 시대엔 유대

인·성소수자·장애인, 오늘날엔 무슬림·이주민)을 두려움에 질리게 만드는 가두 행진으로 중간계급의 착각과 환상을 자극한다. 노동자 운동과 좌파는 거리에서 이들을 패퇴시키고 무슬림·이주민 등을 방어하는 활동도 조직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파시즘이 다른 우익 세력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 파시즘에 맞선 공동 투쟁을 위해 혁명가들과 개혁주의자들이 단결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공동전선은 전반적인 정치 강령이 아니라 몇 가지 요구 중심으로, 행동 건설을 주목표로 건설돼야 한다.

저항의 잠재력은 있다. 지난해에 일어난 노동개악 반대 파업은 비록 노조 상층 간부들이 정면대결을 회피해 결국 패배했지만, 지배자들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음을 보였다. 2013년에는 인종차별적 강제추방 정책에 맞서 청소년 수천 명이 행진을 벌인 바 있고, 올해 3월 19일에는 ‘인종차별 반대 국제공동행동’의 일환으로 1만 명이 파리 도심에 집결했다.

파시즘의 전진을 막을 열쇠는 바로 이런 노동자·청년·학생의 의지를 수렴하는 것에 혁명가들이 개입하고 노동자계급의 힘을 실제로 발휘하는 데 있다.

추천
소책자

**파시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레온 트로츠키 지음, 최일봉 옮김.
3,000원, 74쪽.

구입 문의 :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문재인 후보, 알량한 공약으로부터도 뒷걸음질

문재인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적폐 청산”을 내세운다. 그러나 박근혜의 경제 교사라 불리며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 정책을 만든 김광두나 이명박 정부에서 연합뉴스 편집국장이었던 이래운(당시 연합뉴스 노동자들은 보도통제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다)등 적폐 인물을 영입하고 있다. 그나마도 최근 공식 대선 출마문에서는 적폐 청산 용어가 빠졌다.

문재인은 거의 모든 연설에서 “촛불”을 강조해 왔다. 촛불 운동의 일부임을 강조하는 것이 압도적인 반박근혜 정서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촛불 운동이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지만, 문재인은 11월 중순까지 그에 반대해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황교안이 권한 대행 자리에 앉았을 때도 민주당은 황교안 퇴진을 요구하는 것에 반대했다.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세력의 반격이 한창이던 때, 현재 판결이 무엇이든 “승복하겠다”고도 말했다.

최근에도 문재인은 박근혜 구속에 찬성하고 이재용 구속을 환영한다면서도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천명하자는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지를 남겼다.(대통령 사면권 제한이 그의 공약인데도 말이다.)

재벌 총수들이 박근혜 게이트 공범으로 분노의 초점이 된 상황을 반영해 재벌 개혁을 내세우지만 근본적으로 감히 재벌들의 이익을 건드리지는 못한다. 문재인 재벌개혁의 골자는 투명한 경영, 공정한 경쟁으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올해 초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에 기초를 두고 있는 듯하



문재인 후보의 모습

심화하는 경제 위기 때문에 좌우를 아우르려 하는 문재인의 시도는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다.(그나마도 개혁 대상을 4대 재벌로 한정했다.)

그러나 투명한 경영이 경쟁의 압력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구조조정, 임금 삭감, 조건 악화 등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조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는 이런 압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이 점에서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분열을 낳을 수 있다. 기업의 소유 구조를 재편하고 자본의 집중을 막는다고 해서 — 설사 그게 가능하든 — 노동자들이 볼 이득은 별로 없다. KT가 주주들의 이익을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행한 것은 주주권한 강화가 곧 노동자

들에게 혜택은 아님을 보여 준다.

문재인은 사내유보금 7백조 원이 흘러나와야 한다고 하면서도 재벌들의 공간을 열게 할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법인세 인상에도 부정적이다.

오락가락

문재인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를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임금 삭감과 조건 악화가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없다. 더구나 고용을 늘리려면 노동자들도 양보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화협”을 주장한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로 벌어진 공무원연금 개악을 좋은 예라고 추켜 세우면서 말이다.

기업주들이 더 쉽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법안을 개악한 것이 노무현 정부였는데도 정부의 선의가 기업들에 의해 악용됐으며 책임을 회피한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문재인은 절차만을 문제 삼고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말만을 반복하고 있다. “다음 정부로 미루에 있어서 찬·반 어느 쪽도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문재인은 2012년 대선에서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비판하면서도 기지 건설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진보가 안보에서도 더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국방비 증대 비율이 높았다고 자랑하고, 동아시아 불안정을 증대시킬 한미일 군사동맹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최근 세월호 인양이 시작되자 문재인은 2기 특조위를 당장 가동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1기 특조위가 강제 해산될 때 민주당은 팔짱 끼고 있었다.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로 대중적 공분이 폭발하고 특별법 제정 운동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형성됐을 때조차 새누

리당과 배신적인 타협을 거듭하며 유가족 쪽에 양보를 강요하더니 결국 누더기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016년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가 됐지만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최근에 민주당은 유가족들의 요구에서 한참 후퇴한 선제조사위원회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참사의 배경인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민주당도 공범이다.

한편, 문재인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반대해 성소수자 단체를 포함해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 단체들로부터 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런 오락가락하는 행보는 문재인과 민주당이 자본주의를 확고히 지키면서도 진보적 지식인들, 진보적 시민단체들, 노동조합의 일부 지도자 등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중의 환심을 사려 하지만(민중주의, 포퓰리즘) 결코 지배계급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거스르려 하지 않는다.

고통과 환멸의 10년

노무현이 이미 이런 전철을 밟았다. 노무현 정부는 입으로는 개혁을 말하면서 금세 후퇴하다가 마침내 신자유주의적 공격을 일삼았다. “왼쪽 캄백이 켜고 우회전”하는 노무현에 대한 대중의 환멸은 엄청났다.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했고, 시장을 우선으로 한 복지를 시행했다. 그래 놓고서는 “권력은 이미 시장에게 넘어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좌파 신자유주의자”라는 앞뒤 안 맞는 말로 자신의 배신을 합리화했다.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던 노무현은 취임 직후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고, 철도 노조 파업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사상 표현과 출판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처럼 말

했지만 실제로는 대체 입법을 추진했고(그나마 중도 하차했다.), 정작 한총련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탄압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구속된 노동자 수는 1천여 명에 달한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반대 투쟁이 거세지자 야에 집회를 금지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원천봉쇄했다.

김대중 정부도 대우자동차, 호텔롯데 등 노동자들의 투쟁을 잔인하게 짓밟았고 거대한 운동을 통해 구속시킨 전두환·노태우도 사면했다.

이것이 “정치 민주주의는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었다고 문재인이 자화자찬하는 민주당 정부 시절의 진짜 모습이었다. 애초에 이윤을 최우선하고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신자유주의와 대중의 민주적 권리 확장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은 입만 열면 노동귀족 운운하며 노동자 운동을 비난하며 공격했고,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더니 기업주들이 비정규직을 더 쉽게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비정규직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철도 파업에 70억 원이 넘는 손해 청구를 한 것도 노무현 정부였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야만적인 단속추방이 계속됐고, 무고한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처럼 가렸던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불이 나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어찌나 컸던지 2007년 대선은 치르나마나 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비리범벅 이명박이 무난하게 당선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자신들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그 시절을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최근 출간된 《운명에서 희망으로》에서는 노무현 정부 초기에 “노동자들은 더 급하게 더 많은 요구를 하면서 노정이 부딪히고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투표일에 차선책이 될까?

갈등을 일으켰[다]”, “속도 조절을 해 가면서 개혁을 극대화해 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했고 자신들을 기다리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운동권 내 기득권 세력이 노무현에게 비토”를 했다는 평가도 황당하다.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 이라크 파병, 한미FTA 등에 반대한 것이 기득권의 비토란 말인가?

노무현 정부의 실패에 대한 책임전가식 평가가 함축하는 것은 자신에게 개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민주정부가 다시 수립되면 [노동운동이 이제는] 더 합리적인 요구를 해 올 것”이라며 벌써부터 단속을 다짐한다. 이런 중도 입장은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하게 불리었다. “개혁 없는 개혁주의”, “신중도”, “사회(적) 자유주의”, “일하는 복지 국가”, “극단적 중도” 등등.

유신 독재에 저항하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을 내세우다가도 특전사 경력을 강조하며 우익을 안심시키려는 것도 역겨움을 자아낸다.

이미 민주당 정권 10년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이런 논리로 ‘3기 민주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을 흔쾌히 지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와 그 잔당들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하도 커서 문재인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아쉽게도 촛불 운동이 더 급진적인 양상으로, 즉 계급 투쟁으로 깊어지지는 못한 점 때문에 문재인의 대세론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앞에 닥친 조건이 만만치 않다. 경제 위기 심화는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고통전가를 빠르고 강력하게 하도록 압력을 형성할 것이다.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깊어지고 정치적 좌우 대결도 심화해 그가 강조하는 “통합”이 가능하지 않은 순간이 금세 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차별받는 사람들과 노동계급의 운동은 정권 교체가 문제를 크게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지 말고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건설하라고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

김지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월 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012년 대선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그해 9월 통합진보당 분열 사태를 겪은 직후인 데다 박근혜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초반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고 결국 중도 사퇴했다.

이번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여파로 구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20퍼센트를 간신히 넘을까 말까 한 상황이다. 심상정 후보는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해제돼서 마음껏, 우리 정의당의 깃발을 들 수 있는 그런 선거”라며, “민주당이 왼쪽에 있는 정의당과 경쟁하는 구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게다가 정의당은 지난 몇 년 사이 노동자·청년 사이에서 꾸준히 지지를 확대해 왔다. 2016년 총선에서는 심상정 자신이 수도권의 노동자 밀집 지역인 고양시에서 3선에 성공했고, 노회찬 의원도 민주노총의 지원을 받으며 창원에서 당선됐다. 비례후보도 4명이 국회에 입성했다. 정의당은 민주노동당이 얻었던 지지율을 상당히 회복하는 추세다.

그러다 보니 이번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도 상당히 전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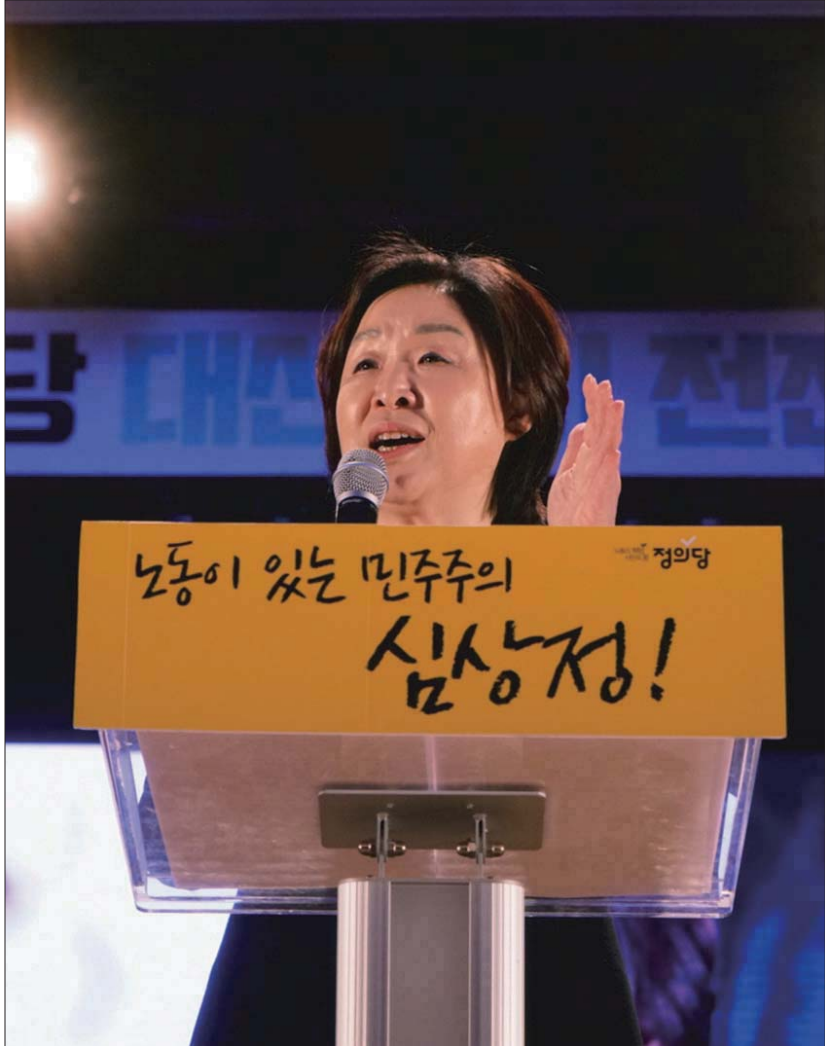
심상정 후보는 스스로를 “노동자 후보”로 부각시키고 있다. 정의당의 대선 표어도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다. 박근혜 퇴진 운동을 계승하려 애쓰는 일에서 민주당과는 변별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후보들이 네나 할 것 없이 계승하겠다고 하는 노무현 정부의 약점을 꼬집었다. “**노무현 정부의 기간제법 도입 당시, 저를 포함한 진보정당은 정부·여당의 기간제법이 비정규직만 확산시키고, 차별 시정에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집권을 말해선 안 된다.**” “**경제민생본야에 있어서는 모든 정부가 친재벌 정부였다.**”

심상정 후보는 출마 선언 직후 춘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맨 먼저 찾아갔다.

“춘천교도소, 제가 승리하면 가장 먼저 사면할 이가 갇혀 있는 곳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해고하고, 박근혜 정권이 감옥에 가둔 노동자 대표 한상균입니다. 제가 전국민주공속노조 사무처장을 지냈을 시절에 그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이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이 일어나기 전, 국정교과서 농단과 노동개악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가장 먼저 싸운 이도 그였습니다. 그 혐의로 받은 형량이 무려 징역 5년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은 한상균이 아니라 박근혜입니다.”

출마 선언에서도 “노동개혁을 새로운 정부의 제1의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총리제 신설, 노동전담 검사제 도입, ‘노동’ 있는 헌법 개정 등 상징적 조치들과 함께 노동자들의 삶과 조건을 개선할 다양한 요구들을 공약에 담았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



난관에 봉착할 민주당과 한 배를 타선 안 된다

동시간 단축, 노동3권 보장 등.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슈퍼우먼 방지법’, 204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탈핵’ 정책, 실질적 반값 등록금과 국립대 무상교육, 복지 대폭 확대 공약 등도 주류 정당 후보들에게는 찾아보기 어려운 진보적 공약들이다.

다른 한편, 노동과 자본의 타협을 통해 노동의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은 걱정스럽다. 가령 초과이익공유제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선의에서 나왔겠지만 역효과를 낼 것이다. 원청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면 원청 대기업의 ‘초과이익’도 줄어 들어 하청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해 줄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사용자에게 맞설 힘을 약화시킬 것이다. (관련기사 ‘정의당 총선 공약 분석 - 노동자와 중소기업, 두 마리 토끼 쫓기’, 〈노동자 연대〉 168호)

노사공동결정제도나 ‘경제사회전략대화’ 같은 노사정 합의기구도 문제적이다. 그런 공상적 개혁을 위한 기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험했듯이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맞서 싸우지 못하게 발목 잡으려 해, 정작 개혁을 제공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기 십상이다. (관련기사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 노동자의 투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을 경계해야, 〈노동자 연대〉 174호)

제국주의

한편 제국주의 관련 입장에서 오히려 약점이 두드러진다. 예컨대 이런 주장을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의 근간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즉 확장 억지력입니다. 그 외에 어떤 합리적 대안도 없다.” 심상정 후보는 미국의 제국주의 공세와 한미동맹을 본질적으로 반대할 수 없다

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미국의 ‘억지력’을 지지하면서 그 일부인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일관될 수가 없다. 최근 대학 강연에서도 사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매번 “실효성 없는 사드 배치 반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사드 배치 반대”를 말하는 식으로 불필요한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모호하게 답변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온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주장이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북한의 핵은 미국의 제국주의 공세가 부른 것이다. 클린턴부터 부시, 오바마 정부를 거치는 내내 언제나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한사코 걸어차 버렸다. 제네바 합의에서 6자회담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예컨대 다음 기사들을 보시오. ‘북한 핵실험 - 미국의 대북 압박이 낳은 위험한 결과 : 유엔 제재는 해결책이 아니다’, 〈맞붙〉 15호, ‘9·19 공동성명 1년을 돌아보며’, 〈맞붙〉 12호)

핵확산방지 원칙에도 일관성이 없다. 미국은 핵 개발 근처에도 못가 본 이라크를 박살냈고, 핵무기를 개발한 파키스탄은 지원했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이고 틈만 나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과 세력을 견제하려고 북한 핵을 빌미로 삼아 왔을 뿐이다. 이런 제국주의 전략이 같수록 동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북한 핵에 반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게다가 핵우산 지지는 정의당이 지향해 온 평화주의와도 모순된다.

6자회담 같은 다자협력 기구를 통해 평화조약을 맺고 동북아 평화를 지

키겠다는 생각은 평화를 염원하는 바람에서 비롯한 것이겠지만 공상적이었음이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관련 기사 ‘한반도를 휘감는 긴장Q&A’, 〈레프트21〉 103호) ‘6자’에는 서로 각축전을 벌이며 갈등을 빚고 있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포함돼 있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착각은 평화주의에서 비롯한 것이다.

민주당 정부 참여는 독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심상정 후보가 독자 완주를 호언장담하면서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도 기정사실화하는 점이다. “우리 정의당이 작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든 크든 연립정부 해야 합니다.”

물론 정의당은 노골적인 부르주아 정당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므로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고 집권까지 나아가는 목표를 갖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한국이라는 구체적 조건에서 이런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집권을 노동계급의 학습 경험으로 여길 것이다.

그런데 정의당이 오롯이 독자적으로 집권하는 것과 민주당 정부에 참여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민주당 정부에 참여하면 제대로 된 개혁은 시도해 보지도 못하고 민주당 배신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해도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부터 마주했던 모순에 금세 직면하게 될 것이다. 비록 두 당이 역사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민주당도 경제 위기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이라는 치명적 환경을 피할 길은 없다. 게다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민주당도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것이 보수 정부 9년 동안 민주당이 그토록 피조피하고 지금도 문재인이 몸을 사리는 이유들이다.

따라서 민주당 정부에 참여하는 건 정의당이 충분히 뜻을 펴 보기도 전에 스스로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동역학에 따라 우파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노동계급이 강력히 반격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박근혜를 쫓아내는 데 성공한 노동자들은 민주당을 미심쩍어 하면서도 지난 10년을 보상받으려 할 것이다. 아무리 친노 계열 부르주아 개혁파들이 노동자들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설교해도 말이다. 정의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정부 편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편에 서 있기를, 함께 싸우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저버리는 불행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성급하게 정치 권력을 넘보지 말고 민주당 정부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오히려 이용해야 한다.

장호중

관련 기사들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브렉시트 협상 개시
지배자들 내분을 이용해 급진적 대안을 제시하며 싸우야
- ★ 기업 성차별에 맞서 싸우는 중국 여성들
- ★ 보수의 새 아이콘이 되고 싶어 하는 안희정
- ★ 전교조 전임자 문제
교육부 항의뿐 아니라 진보교육감 압박도 필요하다
- ★ 쌍용차 해고자 농성
노동3권 제약하는 손배가입류 폐지하라
- ★ 이주노동자 차별
임금 삭감하는 숙식비 징수 지침 철폐하라



용서가 안 된다 1월 14일 12차 범국민행동 행진 대열

사진 이미지

박근혜와 모든 공범들을 구속하라

3월 27일 검찰이 법원에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의 파면 선고 11일 만에 박근혜가 검찰에 나갔고, 검찰 조사 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꼰통 친박들이 박근혜 구속만은 피해 보려고 “전면전”(조원진)을 협박했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지 못했다.

겨우내 매주 거리를 지킨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답답하겠지만, 파면 이후 박근혜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강하게 이뤄진 것이다. 지배계급 다수와 검찰은 정치체제를 빨리 안정시켜 세력 균형을 조금이라도 되찾고자 하는(정상)으로 돌리려면 일단 성난 대중을 달래야 하고, 그러려면 일단 박근혜의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듯하다.(물론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물론 경제·안보 위기가 더 심해지고, 차기 정권이 위기 관리에 실패하면 우익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위기를 겪는 지배계급이 우익적 해결책을 아예 포기한 것도 아니다. 지배계급 단합(협

치, 대연정) 필요성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까닭이다. 또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고뇌’를 토로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은 청와대를 나와서까지 몽니를 부린 박근혜가 자초한 면도 없지 않다. 박근혜가 한때 지배계급 전체의 지지를 받았던 자답게 행동했다면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비록 21일 검찰 조사 뒤에는 뒤늦게 현실감각이 발동했는지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며 아부했지만 말이다.

사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1월 박근혜와 결별했다. 검찰은 박근혜를 ‘사실상의 피의자’로 공표해 퇴진 여론에 순응했다. 박근혜는 넉 달 남짓 동안 검찰 수사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사상누각”이라고 비난해 왔다.(과거 실패한 특검들과는 달리) 박영수 특검의 성공에는 검찰의 이런 달라진 자세와 협조가 작용했다. 검찰 특수본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에 이용했다.

검찰이 망설인 것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실제로 구속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구속됐을 때 정치적 파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이 경우에 삼성 이재용이나 SK 최태원, 롯데 신동빈 등 재벌 총수들의 구속 문제와도 연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들에 관해 검찰은 지배계급 다수의 견해를 확인했을 테고(현 검찰총장은 자신의 전임자들에게 ‘고견’을 들었다고 한다), 정권 교체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차기 정권에게 박근혜의 생사여탈권을 넘기는 것을 택한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이 60퍼센트 지지를 받은 건 아마도 정권 교체 확실성을 높이겠다는 생각들이 반영된 결과인 듯하다. 그만큼 정권 교체 염원이 큰 것인데, 이는 또한 개혁과 적폐 청산의 염원도 크다는 걸 보여 준다.

이런 고려를 때문인지 박근혜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가 포함됐다. 물론 다른 대기업 총수들은 빠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룹 총수 형제의 석방과 사면 혜택을 받은 SK나 역시 불구속 수사의 특혜를 받은 롯데 등도 미르·K스

포츠 재단에 출연했다. 돈을 주고받는 정황도 있다. 이에 대한 수사는 이제 검찰 특수본의 몫이다.

박근혜가 재판에서도 유죄를 받는 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래서 검찰이 뇌물죄를 포함시켜 박근혜를 파렴치한 중대 범죄자로 묘사한 것도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했다는 명분을 강조하는 제스처로 보인다. 검찰은 언론 발표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뇌물 강요와 수수, 블랙리스트 인사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죄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의 하수인들이 구속됐는데, 그 우두머리가 구속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직후, 세월호 인양이 검찰과 지배계급에 큰 정치적 압박이 됐다. 참사 3년 만에 떠오른 세월호는 고통스런 기억과 함께 박근혜에 대한 증오감도 다시 끌어올렸다. 그 비극성과 부조리함 때문에 박근혜 단죄의 제1사유는 단연코 세월호 참사의 책임 문제가 될 터였다. 퇴진 운동으로 사기가 오른

수백만 명이 박근혜가 펴 보지도 못한 청소년들의 생명과 비통함을 능멸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구속이 결정되는 날(31일), 예정대로라면 세월호가 육지로 올라온다. 세월호는 아마 박근혜에게 영원한 저주가 될 것 같다. 그 래야 마땅하다. 향후 수사에서는 박근혜의 구조 책임 방기와 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뿐 아니라, 그 하수인들인 우병우와 황교안, 김기춘 등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거나 세월호 비난 여론 조작과 우익 시위 등을 조종했다는 의혹 등을 모두 밝혀내야 한다.

전체적으로 지배계급이 어떤 계산을 하든 박근혜는 구속돼야 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남은 죄들을 더 철저히 파헤쳐야 하고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승리한 정권 퇴진 운동의 요구다.

김문성

기사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세계를 분석합니다.

- ▶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 차별과 억압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좌파적 관점에서 전하는 신문
-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 1년(26개 호) 50,000원
☐ 2년(52개 호) 100,000원
☐ 2년 이상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 ws@wspaper.org